

대형건설사 공사 물량 독과점 막는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마련

올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심사 기준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 적용할 특례 운용기준 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이다.

우선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존 가격평가 기준을 조정하고 단가심사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평가 시 변별력 확보를 위해 만점 해당 구

간을 축소하고 실효성이 낮은 단가 심사를 없애며 입찰총액을 가격평가로 활용, 텀핑 입찰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대형업체에 수주가 편중되는 쏠림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시공 여유율을 신설키로 했다.

기존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중견건설사들의 사공실적이 부족해 수주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이미 수주한 공사의 건수와 금액을 점수화해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기준을 일부 시범사업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하위윤기자

道 올림픽·SOC 국비 확보 주력

내년 목표액 6조2000억... 올 대비 1285억 ↑

강원도가 내년도 국비 6조2000억원 확보를 위해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확보에 주력한다.

도는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올해 확보된 6조715억원보다 1285억원(2%) 증가한 6조2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정부 예산 신청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도가 국비 확보에 주력하는 현안은 2018 평창겨울올림픽 대회직접관련 조성 사업과 SOC분야다.

겨울올림픽과 관련, △경기장 건설 1653억원 △진입도로 건설 1973억원 △개폐회식장 조성 293억원 △강릉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150억원 등이다.

SOC사업 중 철도 분야는 △춘천~속초 (50억원) △여주~원

주 (12억원) △포항~삼척 (5000억원) △원주~제천 (2500억원)이 포함됐다.

고속도로는 △동서고속도로 동흥천~양양 구간(4862억원) △동해고속도로 삼척~속초 구간(1005억원) △제2영동고속도로(1940억원)가 마무리되거나 본격 추진된다.

국도는 △6호선 횡성~강릉 구간(1976억원) △7호선 삼척~고성 구간(224억원) △31호선 봉화~양구 구간(607억원) △42호선 원주~동해 구간(373억원) 등이다.

또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590억원) △속초항 관광선 여객터미널 신축(94억원) 사업비도 요청할 계획이다.

■ 2016년도 부처별 주요 국비사업

(단위: 억원)

부처	사업명	15년 예산액	16년 소요액
국토교통부	춘천-속초 철도 건설		50
	여주-원주 철도 건설		12
	원주-강릉 철도 건설	9,200	8,000
	포항-삼척 철도 건설	4,540	5,000
	원주-제천 철도 건설	2,087	2,500
	기존선 고속화·평창동계올림픽 지원	46	1,000
	동서고속도로(동흥천-양양) 건설	3,530	4,862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 건설	1,909	1,005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4,500	1,940
	레고랜드코리아 진입교량 건설	199	150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1,936	1,653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진입도로 건설	861	1,973
	개폐회식장 조성	100	293
해양수산부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10	150
	동해 3단계 개발	530	590
	속초항 관광선 여객부두 건설	60	76
산업통상자원부	속초항 여객터미널 신축	25	94
	2016 지역산업육성사업	295	295
행정자치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종합개발	181	121
교육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155	155
국회사무처	고성 국회의정연수원 건립	107	106
기획재정부	2016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	107	106

김성호 기획조정실장은 “국비 확보를 위한 실국장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동시에 정치권

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道 “올림픽 도비 분담 2.7%, 재정파탄 없다”

11 ★ 2018평창올림픽
이제는 힘모을때다

4 평창올림픽 분산개최론 7問 7答

평창겨울올림픽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설(說)이 난무하면서 올림픽에 대한 부정성마저 훼손되고 있다. 강원도는 일부 지역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분산개최론 등 각종 논란에 일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논란은 또다시 논란의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강원도민 일보는 강원도청, 평창겨울올림픽본부, 2018평창겨울올림픽조직위 협조를 받아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 강원도 재정파탄론

올해 강원도 일반회계 규모는 4조340억원, 2013년도 재정자립도는 21.61%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의 도비부담규모가 전체 예산의 2.7%인 3098억원(연간 516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도가 연간 2000억원의 가용 재원을 운영하는 만큼 연간 500억원을 집행하는 것은 큰 부담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 평창올림픽 전체예산 중 올림픽시설 예산

올림픽 대회를 위해 승인된 예산은 모두 11조 4311억원. 이 중 9조4079억원이 접근도로망 확충 등 SOCA다. 이들 예산은 광역간선교통 6곳, 보조간선 6곳, 경기장 진입도로 16곳에 들어간다. 대회지원 시설 비용은 1조 3239억원. 여기에는 선수촌과 미디어촌, 개폐회식장, 급수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경기장 예산은 올림픽을 위해 건설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경기장(△정선 중봉 알파인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강릉 아이스아레나 △강릉하키센터 △관동하키센터 △보광스노보드경기장 △강릉 컬링센터)과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를 모두 합쳐 13곳의 경기장을 짓는 비용이 6993억원이다.

■ 올림픽조직위 전체예산 중 비용분담비율

현재까지 승인된 올림픽 대회 관련시설 예산 11조 4311억원을 부담 주체별로 나눠보면 국비 7

조 5269억원, 지방비 4011억원, 조직위 등이 3조5031억원이다. 조직위 운영비는 2조 540억원 규모다. 이 중 로컬스폰서는 8530억원, IOC 지원금 5902억원, 입장권 1939억원, 라이선스 1643억원, 공무원파견 인건비 등 보조금 2526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 올림픽을 통한 강원도 한류잡기론

강원도는 올림픽을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문화올림픽(5000억원)을 포함해 총 5개 사업에 6996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도관계자는 “대회 관련 시설을 제외하면 올림픽 준비 예산은 매우 미미하다”고 밝혔다.

■ 올림픽 시설별 예산규모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1311억원(국비 983억원·지방비 328억원), 강릉 아이스 아레나(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의 경우 1361억원(국비 1021억원·지방비 34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강릉 하키센터(남) 경기장은 1079억원(국비 809억원·지방비 270억원), 강릉 관동 하키센터(여) 경기장은 620억원(국비 465억원·지방비 155억원)이다. 신설되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1095억원(국비 821억원·지방비 274억원)이,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 경기장은 1228억원(국비 921억원·지방비 307억원)이 필요하다. 보완해서 사용하는 강릉 컬링센터 경기장에는 94억원(국비 71억원·지방비 23억원)이

올림픽 시설 예산

대회 전체예산 11조
경기장 13곳 6993억

올림픽 시설 공정률

알파인경기장 8.2%
관동하키센터 12%

시설 사후 관리

개폐회식장·컬링센터
관리 주체·방안 결정

들어간다. 보광 스노보드 경기장의 경우 당초 205억원(국비 154억원·지방비 51억원)으로 확정됐었지만 790억원(국비 593억원·지방비 197억원)으로 늘었다.

■ 올림픽 시설공사 공정

신설되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공정률 8.2%를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경기코스 공사를 완료하고 2017년 12월 준공된다. 보광 스노보드 경기장은 현재 공정률 98%로 오는 5월부터 2017년 말까지 건설공사를 추진한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재설계 공정률 86%를 보이고 있으며 오는 6월부터 본공사에 들어간다. 10%의 공정률의 강릉 아이스 아레나(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은 지난 해 6월 착공해 현재 진행 중이다. 내년 11월 완료가 목표다.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 경기장은 17.5%, 남자 아이스하키가 열리는 강릉 하키센터는 10%, 여자 아이스하키가 열리는 관동 하키센터는 12%


〈사후활용 관리 운영계획안〉		
경기장	관리주체	사후활용방안
관동 하키센터(주·보조)	기톨릭관동대학교	-교육 및 시민체육시설 활용 주·보조: 대학체육관, 실내 테니스장 등
쇼트트랙 보조	강릉영동대학교	-교육 및 시민체육시설 활용
강릉 컬링센터	강릉시	-시민 종합체육관 활용
보광스노보드 경기장	보광광	-기존 스키장 연계 활용
강릉 아이스아레나	강릉시	-해당 지자체 관리전환 검토 등 수영장 등 시민체육시설, 아웃렛 운영 등
개·폐회식장	강원도	올림픽 역사 기념관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한국체육대 또는 강원도개발공사	-국내외 선수 훈련장 활용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 교육시설 활용
정선 알파인	미정	-민간유치 검토 등 스키장 활용(겨울시즌) 자연체험형 레저시설 활용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미정	-민자유치 검토 등 -선수 훈련시설 등
강릉 하키센터(주·보조)	미정	-선수 훈련시설 등 -철거 및 주차, 매각 검토 등

의 공정률이다. **■ 분산개최론과 향후 일정** 분산개최를 논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테스트 이벤트 일정은 감안하면 분산개최 논의는 불가능하다. 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 등 썰매 경기는 내년 10월 국제 인종을 거쳐 내년 2월 월드컵으로 테스트 이벤트는 올해 10월, 건축물과 부대 시설은 2017년 12월 완료된다. 스노보드/프리스타일 월드컵은 내년 2월과 2017년 2월 각각 두차례 치러진다.

이 때문에 내년에 테스트 이벤트를 가져야 하는 2개 코스는 올해 11월 건설이 완료된다(전체 경기장은 내년 12월). 스피드스케이팅과 컬링 경기 테스트 이벤트는 2017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리는 쇼트트랙 테스트 이벤트는 2016년 12월(ISU 월드컵), 피겨스케이팅은 2017년 2월 4대륙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으로 각각 열린다. 관동 하키센터와 강릉 하키센터는 내년 10월과 11월 완료되면 2017년 3월 테스트 이벤트를 갖는다. 김어진 beatle@kado.net

주요경기장 건설상황

정선 알파인 경기장




총 사업비 1095억원
· 국비 821억원
· 지방비 274억원

공정률 8.2%

추진상황
· 2013년 5월 대회관련시설 사업계획 승인
· 2013년 6월 가리왕산 산림유전자 보호구역 지정해제(78.3ha)
· 2013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 2014년 5월 건설공사 착공

향후계획
· 2015 12월 경기코스 공사완료
· 2017년 12월 경기장 건설준공

강릉 하키센터




총 사업비 1079억원
· 국비 809억원
· 지방비 270억원

공정률 10%

추진상황
· 2014년 3월 설계용역 완료
· 2014년 7월 건설공사 착공

향후계획
· 2015 12월 경기코스 공사완료
· 2017년 3월 테스트이벤트 개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총 사업비 1311억원
· 국비 983억원
· 지방비 328억원

공정률 86% (재설계공정)

추진상황
· 2014년 10월 ~ 2015년 3월 토목공사 추진(완료)

향후계획
· 2015년 6월 ~ 2017년 3월



2018 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 강릉!

나도 **스피드** 실현 선택하는 도시

· http://www.2018smile.kr
· 강릉시 동계올림픽지원단
☎(033)640-5561, 5947/010-8992-2018

한기차 2018 스포츠관광인형 디자인 공모전



목산가

주문전화 1544-0741
Fax 033-242-4612

목산가 대일광업(주)

그라픽/홍석범

표준시장단가도입, 공사비 얼마나 오를까

300억미만 공사 평균 2~3% 상승



표준시장단가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공사의 공사비는 과연 얼마나 오를까.

전체 단가가 확정되기 전까지 발주기관 및 공사금액에 따라 변동폭에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품셈이 적용되는 300억원 미만 정부 및 공기업, 지자체 발주공사의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건설경제>가 업계와 함께 조달청의 주요공사 집행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표준품셈이 적용되는 300억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은 종전 대비 평균 2~3%가량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6면

300억원 미만 공사의 상승폭이 큰 이유는 77개 공정 단가만 조정된 표준시장단가나 종전 실적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와 달리, 실적단가를 크게 상회하

‘표준품셈’ 적용 효과 실적단가 비중따라 차이 200억짜리 공사라면 4억~6억 오르는 셈

는 표준품셈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조달청이 집행했던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실적단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공사비를 기준으로 평균 2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0%는 표준품셈과 설계용역사가 산출한 단가, 견적 등이 각각 30~50% 정도씩 반영되는 구조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체 공사비의 평균 60% 정도가 표준품셈 단가로 구성될 예정으로, 표준품셈과 종전 실적공사비의 차이만큼 예가 상승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2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예로 들면, 평균 20% 정도의 실적공사비

가 적용됐을 경우 예가 중 40억원이 실적단가로 구성된다.

공종별로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실적단가는 표준품셈 대비 약 85% 수준이다.

따라서 40억원의 10~15%만큼인 4억~6억원(2~3%)가량의 예가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별 실적단가 비중이 제각각이고 표준품셈과의 격차도 공종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2~3% 정도의 상승효과는 예상된다”며 “동일한 규모의 공사라 하더라도 실적단가 비중이 크거나 표준품셈과의 격차가 큰 실적단가가 포함된 공사의 예정가격은 그만큼 공사비가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준설공사 등 실적단가 비중이 50%에 이르는 200억원 규모의 공사라면, 앞으로는 종전보다 5~7.5%(10억~15억원)까지 증가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또 반대로 실적단가의 비중이 적거나 표준품셈과의 격차가 작은 공종이 포함돼 있다면 공사비 상승폭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뜻이다.

반면, 300억원 이상 정부 및 공기업 발주공사의 경우에는 일부 공종에 대해서만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의 중간값 정도인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전 대비 예정가격 상승폭은 당분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1968개 실적단가 항목 중 77개 항목만 조정됐기 때문에 조정 항목수가 더 늘어나야 보다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업계는 표준시장단가 도입에 따른 수익성 개선효과는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중소, 지역건설사들부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봉승권기자 skbond@